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2021. 4. 28.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목차

- 연구질문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 쟁점
-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의 소개
-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개선 방향 (경제적 관점)

연구질문

내부통제 관련 연구질문

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2.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내부통제 마련 및 준수는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가? 또는 자율규범인가?
4.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마련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5. 금융회사가 유인을 갖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쟁점

내부통제의 경제적 기능

- 내부통제는 행정규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통제(규제&감독)를 내부화한 것
 - ›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ICT 기술 발전으로 지능형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적출하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짐
 - › 외부통제만으로 금융회사를 규율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내부통제를 발전시킴
 - 외부통제의 내부화 유도를 위해 감독자 책임 및 유인부합적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

외부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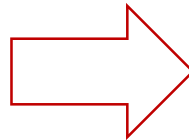
- ✓ 업무범위 다양, ICT 기술 발전
- ✓ 지능형 범죄 증가

내부통제



- ✓ 감독자 책임 부여
- ✓ 유인부합적 인센티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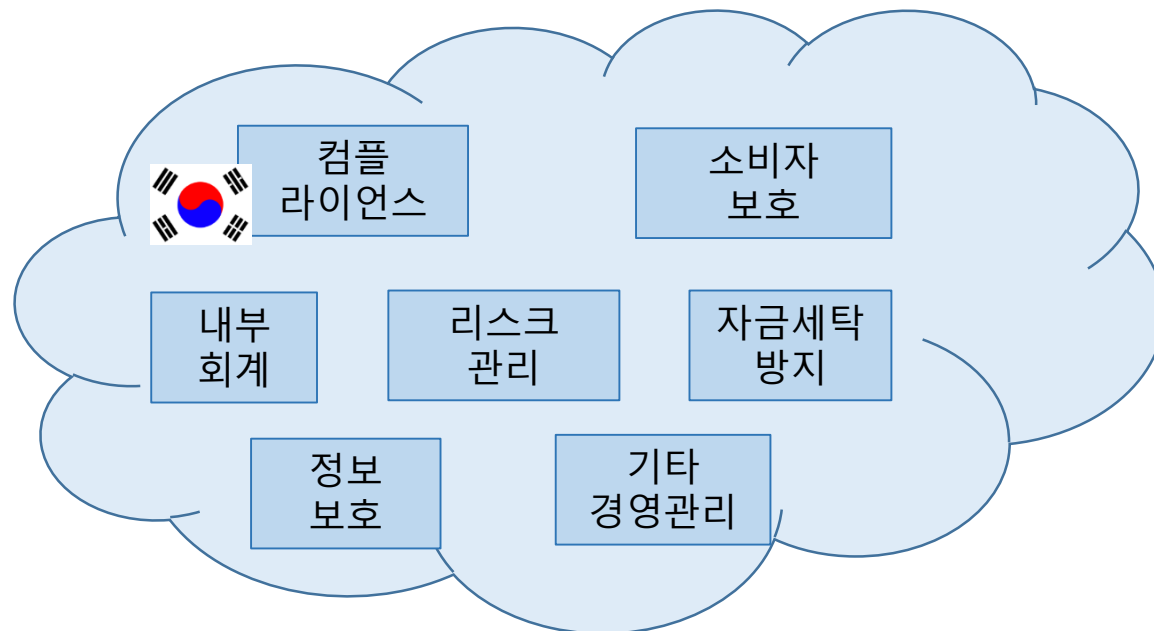
내부화



내부통제 개념에 대한 차이

- 내부통제 개념은 ‘컴플라이언스 준수’에서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로 진화
 - › 내부통제는 기업의 법규 준수, 재무보고 신뢰,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든 활동
 - › 컴플라이언스, 소비자보호, 내부회계, 정보보호, RM, AML 등 모두 포함(COSO(92))
- 여전히 상당수 한국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컴플라이언스 준수로 인식

주요국 내부통제의 범위



감독당국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 CEO에게 책임 부과 없이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는 불가능
 - › 수년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해 행정 규제 및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했으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
 - ›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소홀히 마련하면 CEO를 제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

금융기관	연도	내부통제 소홀건
베어링스은행(英)	1995	싱가포르 트레이더의 파생상품 손실 묵인
엔론(美)	2002	회계 조작
MF 글로벌(美)	2011	고객 계좌 임의운용
Madoff 펀드(美)	2008	폰지 방식 투자운용
H증권(韓)	2013	옵션 주문실수
16개 금융사(韓)	2014	(주)K사 매출채권 사기

감독당국의 인식

CEO 책임 없이 건전 경영 불가

- ✓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마련
- ✓ 내부통제는 모든 업무를 포괄
- ✓ 내부통제 소홀 마련시 CEO 제재

※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지배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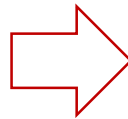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 내부통제는 자율 규범적 속성을 가짐에도, 감독당국은 엄격한 제재 목적으로 활용
 - › 내부통제는 외부통제를 내부화한 것으로 자율 규범적 속성을 가지며, 100% 완벽하게 내부통제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움
 - ›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소홀로 CEO까지 제재

내부통제 미흡 관련 제재내용 예시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금융회사는 XXX 관련 업무 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금융회사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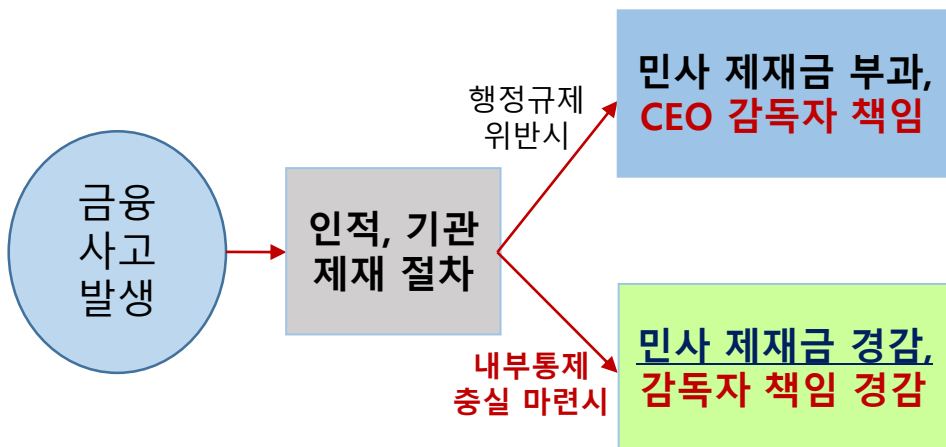
내부통제는 법규 준수를 돕는 것

- ✓ 협회 모범규준 준수의 의미
- ✓ 100% 완벽한 내부통제는 불가능
- ✓ 사고 발생시 내부통제 소홀로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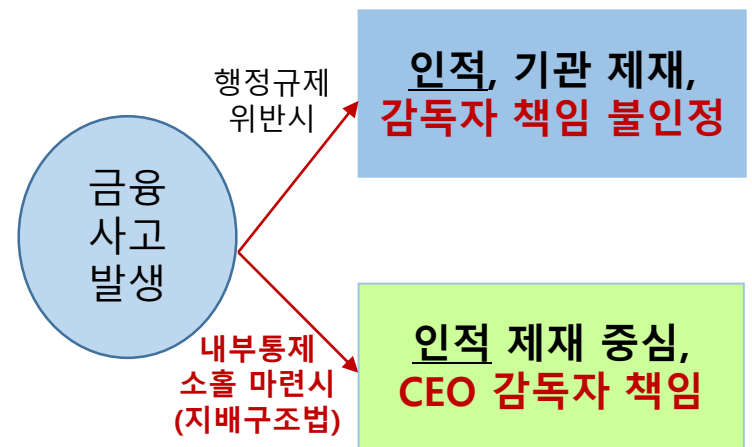
내부통제 활용 및 감독자 책임의 쟁점

- 미국 등 주요국은 강한 감독자 책임 전제하에 내부통제를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
 - › 내부통제를 성실히 마련하고 준수한 경우 민사 제재금 경감이 가능(인센티브 수단)
 - › 임직원 행정규제 위반시 CEO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면 CEO에게 책임 부과 가능
 - 위반행위, 감독소홀 범위에 따라 중간감독자까지만 최종 책임 부과가 가능
- 한국은 법률에서 감독자 책임 부과가 어려워,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 제재 가능
 - › 한국은 이슈가 되는 금융사고 발생시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소홀 마련)’으로 제재
 - › 단 소홀 마련의 범위가 주관적이며, 법적으로 책임자 명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존재

미국 내부통제 활용 및 감독자 책임



한국 내부통제 활용 및 감독자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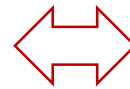
내부통제의 현실적 인식 차이

감독당국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념

✓ 업무 관련 모든 활동



✓ 컴플라이언스 준수

내부통제 의의

✓ 외부통제의 내부화



✓ 당국 규제

내부통제 실행

✓ 능동적, 맞춤형,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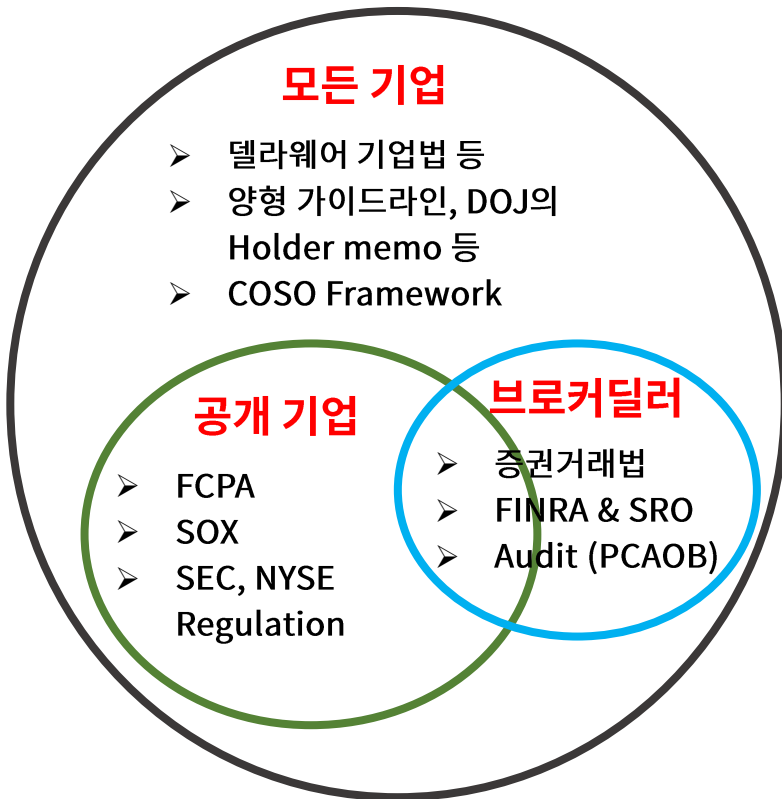


✓ 수동적, 획일적, 비용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의 소개

미국의 내부통제 주요 발전과정: 개관

- 행정규제 한계 극복을 위해 외부통제의 내부화 방안으로 내부통제를 강화
 - ①엄격한 제재 ②경감 등 인센티브 위해 내부통제 활용 ③감독자 책임 강화 추구



미국의 내부통제 제도 발전과정

- 기업의 법적 책임 (Corporate Liability)과 양형 기준
 - 양형 가이드라인 (USSG: 1991, 2005)
 - Holder & Thompson memo : 1999~2008
- 이사회와 감독책임과 의무 (Board's responsibility)
 - 델라웨어 기업법: Caremark (1996) 판결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제
 - FCPA(1977), SOX(2002)
-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권고 및 규정
 - COSO I, II(1992, 2004)
 - 증권거래법(1964), SEC, FINRA, PCAOB

내부통제 마련 의무

- 미국, 일본은 법률에서 현대적 의미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갖췄다고 볼 수 없음
 - › 미국, 일본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내부통제의 범위는 내부회계관리 준수 의무에 국한
 - › 이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개념의 내부통제는 강제화할 수 없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
 - 단 FINRA Rule에서 합리적인 감독 통제(Supervisory Control) 시스템 마련 의무를 부과
- 한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부여
 - › 내부회계관리를 포함한 개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법제화한 것이 구별
 - 내부회계관리 관련하여 한국은 SOX법과 같이 내부회계관리 보고 및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

주요국 내부통제 마련 의무

구분	한국	미국	일본	규제 강도
준수 내용	컴플라이언스, 내부회계, 정보보호, 자금세탁,...	내부회계	내부회계	한 > 미, 일
법적 근거	지배구조법 §24	SOX법 §302, 404 / 주회사법 §8.01 (c) 등	회사법 §348.3.4, §362.5, 금상품거래법 §24의4.4.1	-
준수 대상	금융회사	공개기업 및 자회사, 미국 상장 외국기업 등	대기업(회사법), 상장기업(금상품거래법)	한 > 미, 일
의무 사항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내부회계관리 구축, 보고서 작성, 외부감사	내부회계관리 구축, 보고서 작성	한 > 미, 일

내부통제 관련 제재

- 미국은 내부통제 충실 마련시 민사 제재금 감면이 가능(인센티브 수단)
 - › 내부통제 시스템 충실히 마련시 민사 제재금 감면이 가능
 - › 금융사고 이후라도 내부통제 개선이 인정되면 민사 제재금 감면이 가능
- 한국은 내부통제 소홀 마련시 인적 제재 중심으로 제재
 - › 행정규제 위반 여부와 관련 없이 임직원 및 CEO 제재 가능

주요국 내부통제 관련 제재

구분	한국	미국	일본	규제 강도
기준마련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내부회계관리 의무 위반시 민사 제재금)	큰 피해 없으면 위반 아님	한 > 일 > 미
충실 마련시	-	행정 규제 위반 건에 대해 과징금 감면	-	한, 일 > 미
소홀 마련시	임직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가능	- (컴플라이언스 절차 소홀시 민사 제재금)	내부통제보고서 미제출, 허위 기재시 징역 또는 벌금	한 > 일 > 미

<참고> 국내외 내부통제 인센티브 활용 사례

○ 골드만삭스의 Abacus CDO 부실판매 사건(2011)

- › 골드만삭스는 폴슨앤크(헤지펀드)가 설계한 Abacus CDO 상품을 개인 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팔았던 이유로 SEC에 기소되었으며, 대규모 민사 제재금을 부과 받았음
- › 법원은 이사회가 고의로 해당 상품의 위험을 인지하지 않거나 판매를 독려하지 않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준수했다는 점에서 감독자의 포괄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Morgan Stanley Case (2012)

- › 고위 임원이 중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모건스탠리 회사도 포괄적 징계 여부가 제기
- › 당시 해당 임원은 제재를 받았으나 모건스탠리는 우수한 내부통제를 갖추어 제재 감면

○ Barclays (2015)

- › 영국 바클레이스는 FX 시장 거래 담합 혐의로 3억 5천만 파운드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
- › 최종 판결 과정에서 바클레이스는 내부통제를 잘 갖추었다는 것은 인정받아 과징금의 20%(2억 8천만 파운드, 약 4,400억원)가 할인되어 최종 판결이 결정되었음

CEO의 감독자 책임

○ 미국은 행정규제 위반 관련해서 CEO에게 감독자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

- › 위법행위자 뿐 아니라 위법행위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중간)감독자 및 최고상급 감독자 또는 회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1934년 증권거래법 15(b)(4)(E))
 - 감독소홀의 범위) 감독 소홀, 지배자(Controlling person) 책임, 공모 등
 - 지배자의 범위) 대주주, 이사회 멤버 등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자(1933년 증권법 15조)
- › 위반행위, 감독소홀 범위에 따라 중간감독자까지만 최종 책임 부과 가능

○ 한국은 행정규제 위반시 감독자 책임 부과가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제재

- ›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내부통제 소홀 마련 건으로 CEO까지 책임 부과 가능
- › 단 소홀 마련의 범위가 주관적이며, 법제에 근거한 책임자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

주요국 CEO의 감독자 책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규제 강도
CEO 감독책임	실질적 부과 (법리가 다소 모호)	강화하는 추세 (단 금전 제재)	부과 가능	한, 미 > 일

<요약> 주요국 내부통제 관련 제도

- 미국: 민사 제재금 강화, 내부통제를 인센티브로 활용, 감독자 책임 강화

주요국 내부통제 관련 제도 요약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의의 및 발전과정	컴플라이언스 중심, 수동적, 회일적, 비용	전사적 리스크 관리, 능동적, 맞춤형, 투자	내부회계관리 중심
운영 방식	CEO 포함 임직원 제재	민사 제재금 경감을 위한 인센티브 제시	-
감독자 책임	행정규제 위반에 대해 CEO 감독자 책임 불가, 대신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CEO 책임 부가 가능 (법 해석에 이견)	행정규제 위반 & 감독의무 소홀시, (중간)감독자 책임 부과	부과 가능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개선 방향 (경제적 관점)

내부통제 관련 연구질문에 대한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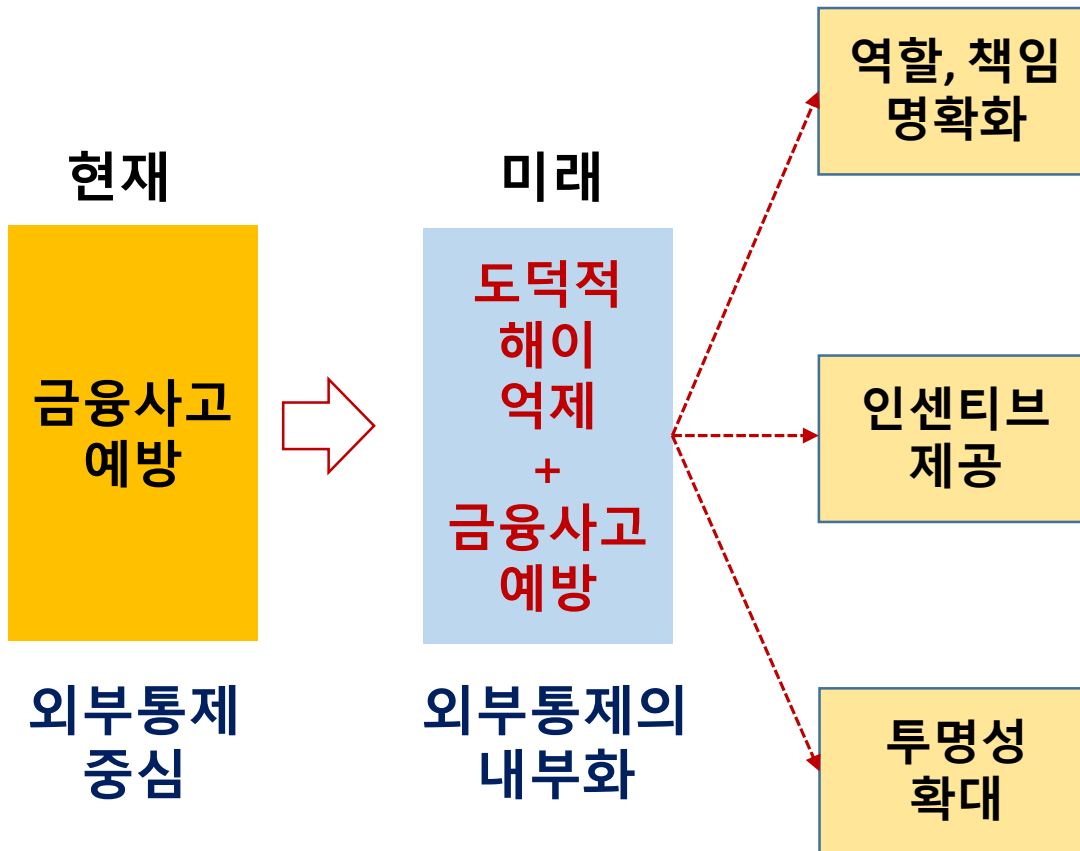
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외부통제의 내부화 / 건전경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
2.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배구조법 제24조제1항의 해석 및 적용**
3. 내부통제 마련, 준수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가? 또는 자율규범인가?
→ **'법률/자율'에 장단점 존재, 중요한 것은 실효성, 유인부합적 내부통제**
4.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마련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합리적 수준(금융사고를 100% 차단하는 뜻이 아님)의 내부통제 마련**
5. 금융회사가 유인을 갖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선언적 의미의 공감대, 감독자 책임, 제재 경감 등 인센티브 제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1. 행정규제 규제 위반 & 감독 의무 소홀시 CEO 등 감독자 책임 명확히 함
2. 내부통제는 처벌 목적이 아닌 제재 경감의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
 - '전사적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마련 유도
3. 이를 위해 인적 제재 중심에서 금전 제재 중심(예: 과징금 강화)으로 변화
4.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법률로 강제화하지 않고, 업계 자율 규제로 유도
5. 내부통제기준의 업계 공유 활성화, 교육 및 자격증 프로그램 확대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경제학적 관점

내부통제 목적



내부통제 개선 방향

- ✓ CEO 등 감독자 책임 구체화
- ✓ 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
- ✓ 내부통제 준수시 제재 경감
- ✓ 자율규범으로 내부통제 활성화
- ✓ 내부통제기준 공유 활성화
- ✓ 내부통제 교육, 자격증 활성화

역할과 책임 구체화

감독자 책임

- ✓ CEO 등 감독자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 주요 행정규제를 위반하고 감독의무 소홀시 CEO 책임 부과

제재 변화

- ✓ 인적 제재에서 금전 제재 중심으로 제재 방식 변화
- ✓ 높은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고려

유인부합적 내부통제 도입

제재 경감

- ✓ 내부통제 충실 마련, 준수시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 금융사고 이후라도 내부통제 개선이 인정되면 인센티브 부여

자율 규범

-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법제는 선언적 의미 부여 또는 삭제
- ✓ 자율 규범으로서, 내부통제 마련 및 준수 활성화를 유도
(당국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투명성 제고: 사후관리 및 교육 활성화

보고 의무

- ✓ 내부통제 개선 현황 등 주요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
- ✓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을 업계 전체에 공유

교육 활성화

- ✓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 내부통제 전문 자격증 제도 등을 도입

감사합니다.